
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	 혁신성장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든다
보도일시	2019. 3. 13(수) 10:00	배포일시	2019. 3. 13(수) 08:00	
담당과장	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장 권중각 (044-215-5450)	담당자	권순배 사무관 (044-215-5451) ooh471@korea.kr 장시열 사무관(044-215-5457) siyul@korea.kr	

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발표

- 기획재정부는 '19. 3.13.(수) 「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」에서 「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」을 발표하였음.

[추진배경]

- 민자사업은 그간 필수 공공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나,
- '07년 이후 신규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음.
- * 실시협약금액(조원) : ('98) 2.7 ('04) 5.5 ('07) 11.6 ('09) 9.3 ('12) 5.9 ('15) 5.3 ('17) 4.2
사업수(건) : ('98) 4 ('04) 19 ('07) 119 ('09) 95 ('12) 31 ('15) 16 ('17) 9
- 민간의 투자가 부진하고, 사회분야 소요 증가로 SOC 재정 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짐.

[기본방향 및 주요내용]

- 「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」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음.

① 대형 민자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다각적으로 지원

- 먼저, 관계기관 협의·조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12.6조원 규모의 13개 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지원하겠음.
 - * 구미시하수처리시설, 광명~서울 고속도로, 만덕~센텀 고속화도로, 평택~익산 고속도로, 신안산선 복선전철, 동북선 경전철 등
- '2019년 경제정책방향'에서 신속 추진하기로 한 11개 사업(4.9조원)은 관련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를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시키겠음.
 - * 용인시 에코타운,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, 위례~신사선 철도, 부산시 승학터널, 오산~용인 고속도로 등
- 아울러, 정부가 선도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·지자체가 참여하는 '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'를 구성·운영하겠음.
- 3.14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, 신규 민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·추진할 계획임.

② 민간투자 촉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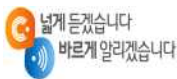
-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대해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분야의 민자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음.
- 국가재정법상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하겠음.
- 또한,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여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겠음.

- 실시협약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,
 -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민자사업 요금을 인하하여 재정 사업과의 요금불균형도 해소해 나갈 계획임.

[기대효과]

- 「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」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
- 아울러, 대형 민자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공공시설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,
- 민자시설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등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민간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※ (별첨)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이 자료는 2019년 3월 13일(수) 10:00 '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' 종료
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경제 활력 대 책 회 의
19-9-1 (공 개)



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

2019. 3. 13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 .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	1
II .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신속 추진	2
III .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운영 합리화	5
IV . 세부 추진일정	7

I. 추진배경 및 정책 기본방향

□ 민자사업은 필수 공공시설의 조기 확충 및 경기회복에 기여

- **[재정 보완]** '95년부터 현재까지 필수 사회기반시설 조기 확충(실시협약 기준 719개 사업, 114.5조원)에 기여
- **[경제적 효과]** 민간여유자금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* 등 경제활력 제고

* '95 ~ '16년간 취업유발효과(72만명) 및 생산유발효과(152조원) 창출('17, KDI)

□ 다만, 일부 시설의 높은 사용료 및 투명성 부족으로 신뢰 부족

- **[높은 사용료]** 재정사업 대비 높은 요금으로 국민부담 발생
 - * 재정으로 대비 국가관리 민자도로(18개노선) 요금수준('18년) : 1.43배
 - **[투명성 부족]** 많은 국민들이 정보공개 미흡 등 민자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(82.0%) 하다고 인식('17년, 민간투자학회)
- ⇒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 부족, 주무관청의 추진의지 약화 등으로 인하여 신규 민자사업 규모 축소

* 실시협약금액(조원) : ('98) 2.7 ('04) 5.5 ('07) 11.6 ('09) 9.3 ('12) 5.9 ('15) 5.3 ('17) 4.2
사업수(건) : ('98) 4 ('04) 19 ('07) 119 ('09) 95 ('12) 31 ('15) 16 ('17) 9

□ 2019년 민자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를 균형감 있게 병행 추진

- **[민자 활성화]** 사회 분야 소요 증가*에 따른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, 부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자 활성화
 - * 총지출 대비 SOC 지출비중(%) : ('10) 8.5 → ('15) 6.6. → ('18) 4.4 → ('19) 4.2
보건·복지·노동 지출비중(%) : ('10) 27.6 → ('15) 30.6 → ('18) 33.4 → ('19) 34.0
- **[공공성 강화]** 민자시설 사용료 인하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, 관련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 투명성 강화

II.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신속 추진

1. 연내 12.6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 착공

◇ [추진내용] '19년 착공 가능사업(13개, 12.6조원) 조속 추진

- 관계 부처·지자체와의 이견 조정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, 주민민원 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 연내 착공 추진 (5개, 12.0조원)

【착공 지연 사업 사례】

① 평택-익산 고속도로 (3.7조원)

- ▶ (현황) '14년 민간이 제안하여 '17.2월 실시협약까지 완료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지연되어 미착공 상태
- ▶ (조치사항 및 향후계획) 관계 부처간 이견 조정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(2.22) 후 실시계획 승인신청(2.26), 농지(농림부)·산지 전용(산림청)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조속히 완료 후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추진(9월)

② 광명-서울 고속도로 (1.8조원)

- ▶ (현황) '18. 2월 실시계획이 승인 되었으나, 주민 민원 및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일부 구간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(20.2km 중 4.9km)되어 착공이 지연
- ▶ (조치계획) 주민 설명회(격주 개최) 등을 통해 주민설득 및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 추진(3/4분기)

- 환경시설, 대학 기숙사, 어린이집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은 4월까지 착공 완료 (8개, 0.6조원)

◇ [추진계획] 사업별 추진상황 지속 관리

-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지속 관리를 통해 목표 달성 유도

사업명	총투자비 (조원)	현 황	'19년 추진 계획
합 계 (13개)	12.6		
○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 (2개)	0.1	실시설계	○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(4월)
○ 경찰청 어린이집, 폴리텍 기숙사, 병영시설 등 (6개)	0.5	실시설계	○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(4월)
○ 광명~서울 고속도로	1.8	실시 설계완료 주민·지자체 협의 중	○ 지자체협의→착공(3/4분기)
○ 만덕-센텀 고속화도로	0.8	실시설계	○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(7월)
○ 평택~익산 고속도로	3.7	실시 설계완료 관계부처·지자체 협의 중	○ 농지·산지 전용허가 등 인허가 협의 → 착공(9월)
○ 신안산선 복선전철	4.1	실시설계	○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(하반기)
○ 동북선 경전철	1.6	실시설계	○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(10월)

◇ [기대효과] 투자확대,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 도출

2.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신속 추진하여, 착공 시기 단축

◇ [추진내용] 주요사업 집중 관리, 추진 단계별 기한 제한 규정 신설

-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* 최대 허용 기한을 제한하여, 예측하지 못한 사업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을 방지
 - * 민자적격성 조사 → 사업지정 및 사업계획 고시 →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→ 실시협약 체결 → 실시계획 승인 → 착공
-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*하고, 실시협약 기간도 최대 18개월**(1년 원칙+6개월 연장)로 한정
 - * (現) 6개월 원칙 규정이 있으나, 최장 2~3년 소요 → (改) 6개월 원칙, 최장 1년 규정 신설
 - ** (現) 도로사업은 평균 22개월, 철도는 26개월 소요 → (改) 최대 18개월 제한 규정 신설
- 유관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요사업('19년 경제정책방향 포함 사업) 절차 집중 관리를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

사업명	총사업비 (조원)	실시협약 체결		착공		
		당초*	목표	당초*	목표	단축
합 계 (11개)	4.9					
○ 용인시 에코타운	0.2	'20. 3.	'19.12.	'20.12.	'20. 8.	△4개월
○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	0.2	'20. 2.	'19.10.	'20.11.	'20. 9.	△2개월
○ 위례-신사선 철도	1.5	'22. 3.	'20.12.	'23. 6.	'22.12.	△6개월
○ 부산시 승학 터널	0.5	'21. 7.	'20. 9.	'23. 1.	'21.12.	△13개월
○ 오산-용인 고속도로	1.0	'22. 3.	'20.12.	'23. 9.	'21.12.	△21개월
○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**	1.5	'19.12	'19.12.	'21.12.	'20.12	△12개월

* 민자시설 유형별 평균 소요기간 적용 기준

** 부산항신항 웅동 2단계 등 6개 사업으로 일정은 부산항신항 사업 기준으로 작성

◇ [추진계획]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(3월)

- 최대 허용 기한 제도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(3월)
- 집중관리 사업 중 연내 용인시 에코타운(12월), 천안시 하수처리장(10월) 실시협약 체결 완료하여, '20년 착공 가능토록 지원
 - 위례-신사선(4월), 승학터널(4월), 오산-용인 고속도로(10월)의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 완료

◇ [기대효과]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편의시설 조기 공급

- 사업비 증가 등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감소 및 불확실성 해소

3.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

◇ [추진내용]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·추진 가속화

- 정부고시사업으로 준비 중이거나, 민간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대해 민자 적격성조사 신속 의뢰
- 민자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(26개, 12조원)에 대한 관리·점검 강화
 - 서부선 도시철도, 대전하수처리장 등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연 중인 사업은 쟁점해소를 통해 '19.上 중 조사완료 추진

◇ [추진계획]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

- 중앙부처·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
 - 민자 프로세스별 진행상황 점검, 신규 민자사업 발굴

◇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(안)

- ▶ (구성) 기재부 제2차관(주재), 국토부·해수부 등 주요 민자사업 관련 중앙부처, 17개 광역자치단체,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
- ▶ (운영) 분기별 개최 원칙('19.3월 1차회의 개최 예정), 필요시 상시 운영
- ▶ (역할) '19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과제 이행상황 점검, 도로·철도·환경 등 분야별 신규 민자사업 발굴,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논의

◇ [기대효과] 민간투자시장 활력 제고

- 신규 사업의 적극 발굴과 적격성 조사 중인 사업의 신속 추진을 통해 민간투자시장 활력 제고

III.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운영 합리화

1. 포괄주의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 대상시설 대폭 확대

◇ [추진내용 · 계획] 대상시설 53개 → 모든 사회기반시설

- 규제방식 개선(열거주의→포괄주의)을 통해 현재 53개로 한정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
 - * (현행) 열거된 시설과 유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 추진 불가능, 새로운 민간투자 추진에 탄력적 대처가 곤란
 - (개선) 포괄주의를 통해 주무관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민자추진 허용
- 3월 內 민투법 개정안 발의하여, 연내 국회 통과 추진

◇ [기대효과]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시장 창출

- 완충저류시설, 공공폐수관로 등 설치사업 등을 민자를 통해 조기 추진 가능 → 새로운 민자시장 창출(1.5조원+a 규모)

2. 민간제안사업 추진 지연요인 해소

◇ [추진내용] 제안서 검토기관 다원화 및 경제성 분석 면제 규정 도입

- ①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원 → 제안서 검토 기관 다원화*
- ②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대상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·정책성 분석을 면제**
 - * (現)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가 경제성 분석 수행 → (改) 일정규모(예타 비대상 등) 미만 사업은 여타 전문기관으로 이양
 - ** 민자적격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(B/C), 정책성 분석(AHP), 적격성 분석(VfM)으로 구성
-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(2월) → 시행령 개정 완료(4월)

◇ [기대효과]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조기 공급

- 법정필수시설 등 예타면제 대상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6개월 이상 단축

3.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

◇ [추진내용 · 계획] 산업기반신용보증 한도 확대

- 산업기반신용보증* 최고한도액을 상향(4,000→5,000억원)하여, 민간투자사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**을 지원

* 민투법 제30조에 근거하여,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

** 보증부대출금리가 비보증부대출금리보다 통상 0.7%p~1.0%p 정도 낮은 수준

-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(2월) → 시행령 개정 완료(4월)

◇ [기대효과] 민간투자 촉진 및 사용료 인하

- 대규모화 되는 민간투자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, 사업시행자의 조달여력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 촉진 유도

4.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공개 강화 및 사용료 인하

◇ [추진내용 · 계획] 실시협약 등 정보공개 강화, 민자도로 요금 인하

- 사업자의 경영상 비밀을 제외하고, 실시협약 정보 공개를 의무화*,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**

*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,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,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등 명시한 실시협약 정보 공개(민투법 개정안 발의, 3월)

** 정보 공개 방안 마련('19.上) → 민자사업 단계별 진행상황 공개('19.下)

-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*의 요금을 인하·동결하고, '19년말까지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(2개 노선**)

* 구리-포천(1.23→1.16배, '19.1), 천안-논산(2.09→1.1~1.3배, '19.12), 안양-성남(0.95배). 인천-김포(1.13배) : 자금재조달 이익 동결에 사용('19.6)

** 대구-부산, 서울-춘천 : '19년말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

◇ [기대효과] 민자사업 관련 국민 신뢰 회복

-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, 중장기적으로,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환경 조성

IV.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

연번	주요 과제 [소관부처]	추진 일정
【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신속 추진】		
1. 연내 12.6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 착공		
1-①	신안산선, 동북선 경전철 신규 착공	▶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('19.下)
1-②	평택~익산, 광명~서울, 만덕~센텀 도로 신규 착공	▶ 환경·교통 영향평가, 민원해결 등 완료('19.上) ▶ 착공('19.下)
1-③	생활밀착형 민자사업 착공	▶ 8개 사업 신규착공(4월)
2.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신속 추진하여 착공 시기 단축		
2-①	용인시 에코랜드, 천안시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	▶ 협상대상자 지정('19.上) ▶ 실시협약 체결('19.下)
2-②	위례-신사선 철도, 부산시 승학 터널, 서울 창동 K-Pop 공연장	▶ 제3자 공고(4월) ▶ 협상대상자 지정('19.下)
2-③	오산-용인 고속도로	▶ 전략환경영향평가(-9월) ▶ 제3자 공고(10월)
3.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		
3-①	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	▶ 협의회 구성 및 1차회의 개최(3월)
【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운영 합리화】		
1	포괄주의 도입	▶ 민투법 개정안 발의 (3월) ▶ 개정 완료(3/4분기)
2	제안서 검토기관 다원화 및 B/C 면제 규정 도입	▶ 시행령 입법예고(2월) ▶ 시행령 개정완료(4월)
3	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액 상향	▶ 시행령 입법예고(2월) ▶ 시행령 개정완료(4월)
4	실시협약 정보 공개 의무화	▶ 민투법 개정 발의(3월) ▶ 개정 완료(3/4분기)
5	추진 단계별 진행상황 공개	▶ 정보 공개 방안 마련('19.上) ▶ 진행 상황 공개('19.下)
6	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	▶ 2개 노선 요금인하('19.下) ▶ 2개 노선 방안마련('19.下)